

13강 -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 핵심용어(용어사전)

- * 심의기관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연구·심사 또는 조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 * 의결기관 :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관.
- * 자문기관 : 조직체에서 집행기관이 집행할 안의 내용과 방법 기타 문제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는 기관.

■ 사례1 :

<사건의 개요>

A는 2006. 5.경 미국에서 중학교 7학년을 마친 후 귀국하여 같은 해 6. 21. 서울 강남구에 있는 S중학교 1학년에 편입학하였다. A는 2006. 6. 30. 방과 후에 S중학교 매점 옆 구석에서 다른 반 학생인 B와 싸움을 하여 A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B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싸움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S중학교장은 2006. 7. 1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A 및 B가 작성한 사실보고서 및 반성문 등을 기초로 싸움의 경위 등을 확인한 다음, 위 싸움이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B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 A에 대하여 사회봉사 3일의 각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A의 부모는 A에 대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S중학교장에게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S중학교장은 같은 해 8. 28.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A 부모의 재심신청을 심의한 후 같은 날 종전과 같이 B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 A에 대하여 사회봉사 3일의 각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A에게 서울 동작구 소재 'OO사회복지관'에서 위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이수받을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A의 부모는 위 재심결정에도 불복하여 위 OO사회복지관에서의 사회봉사 3일의 이수를 거부하였고, 이에 S중학교장은 2006. 9. 11.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폭력예방 운영계획' 소정의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A에게 A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의 출석정지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13. 이를 A의 아버지에게 통보하였다('이사건처분'이라 한다).

이에 A는 S중학교장을 상대로 무기한의 출석정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A의 청구는 타당한가?

<이 사건의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폭력예방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A에게 선행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 출석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의 결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오로지 이 사건 싸움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경위와 쌍방이 입은 피해정도 및 B가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에 대한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A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폭력예방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A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 출석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학교장이 그 소속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등 불이익 처분은 교육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지 않는 징계등 불이익 처분은 비록 그것이 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인 조건부 무기한 출석정지처분을 취소하였다.

<전문가의 의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폭력예방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하였고, 위 운영계획은 중학교 폭력문제 담당 교사가 작성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교사 1인이 작성한 ‘운영계획’이 이러한 징계의 적법한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폭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가해학생이 징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행한 처분이 법규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학교폭력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상 자치위원회가 이러한 재차 징계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가 정한 징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법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의 징계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학교폭력법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하나로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은 출석정지된 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조건부로 다른 중한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할 수 있다.

<본 학습>

1. 자치위원회의 구성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위원장 1인을 포

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치위원회 위원은(1) 해당학교의 교감, (2) 해당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위(1) 내지 (7)중에서 해당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 선도 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차이

- ① 선도위원회 :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제반 비행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학교자치기구이며 교원으로 구성되어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정기구이며 교원 외에도 학부모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있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발달과정상에 있는 학생 청소년들의 사건을 형사, 민사적으로 확대시키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 내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로 기재함)를 둔 것이다. 따라서 자치위원회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적 법집행과 교육적 해결 과정의 중간적 역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은 필수적으로 학교 내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 비행 건은 학교 자치기구인 ‘선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였다면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징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선도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조치할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징계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선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

4. 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근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처벌, 치료하고, 피해자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학교폭력예방교육(동법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실시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해당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교재도 책정이 되어야 하고, 이 교육을 위해서 교사 연수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나 단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요구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를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2) 피해학생의 보호(동법 제16조)

- ① 심리상담 및 조언 : 피해학생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상담전문교사나 심리치료 전문상담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교 폭력이 심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관계향상치료까지도 해줄 수 있다.
- ② 일시보호 :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치료를 위한 요양 : 또한 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하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부득이 하게 수업을 결석하게 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결석은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석인정 뿐 아니라 이런 보호조치로 성적에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학교폭력법이 그 누구보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학급교체 : 일시보호 이외에도 학급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인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해학생의 학급교체와 함께 피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할 수 있다.
- ⑤ 전학권고 : 다른 조치를 취해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힘든 경우 최후의 조치로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가게 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학생이 원하거나 위원회에서 문제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결정된 다른 조치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우선은 사과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므로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동에 대해 사과하도록 한다.
-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 피해사실을 학교에 알렸다고 해서 피해학생에게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학생에 대해 접촉이나 협박을 금지 할 수 있다.
- ③ 학급교체 :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반을 바꾸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학 :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전학을 보내는 것이 피해·가해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하고 판단되면 전학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 ⑤ 학교에서의 봉사명령 : 가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⑥ 사회봉사명령 : 사회에서 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⑦ 각종 특별 교육과 치료조치 : 특별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받게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⑨ 퇴학처분 :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이므로 힘들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징계로도 상환이 해결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가해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4) 중재 및 위기개입을 통해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피해·가해학생이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교육적인 ‘중재’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치료비 및 합의금 문제가 있을 경우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도록 한다.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건처리과정

(1) 사건접수, (2)학교폭력사건조사, (3) 피·가해자측 학부모 연락, (4) 자치위원회 개최일시 전달, (5) 자치위원회 개최, (6) 자치위원회 결정사항 실행, (7) 자치위원회 결과 지역교육감 보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주요내용

가.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1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바.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①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정리하기

학교폭력 사건은 필수적으로 학교 내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 비행 건은 학교 자치기구인 ‘선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였다면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징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선도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조치할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징계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선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가 있으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하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평가하기

문제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과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 (3)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학교장이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해설 : 정답 (4)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제 2.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관한법률 상 피해자 및 장애학생의 보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3)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4)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의 2 제2항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제 3.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관한법률 상 가해자에 대한 조치 중 틀린 것은?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4) 무기한 출석정지

해설 : 정답 (4)

1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다.